

국내소식

지자체 대상 탄소포인트제 본격실시

환경부는 7. 1일부터 전국의 희망 지자체를 대상으로 「탄소포인트제」를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작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실시했던 탄소포인트제는 가정·상업(건물) 등의 전기, 가스, 수도 등의 절약실적을 온실가스로 환산하여 포인트를 발급하고, 1포인트 당 3원 이내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온실가스감축실천 프로그램이다.

실시항목과 포인트 지급방법 등은 지자체별로 캐쉬백(지정부 탄소캐쉬백과 공동사용) 카드에 적립하여 현금처럼 사용하거나 아파트 관리비로 납부, 기타 현금 및 교통카드, 주차권, 쓰레기봉투 지급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선택 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인센티브 지급 금액의 50%를 국고로 지원할 계획이며, 해당 지자체와 지역 주민이 직접 가입하여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운영프로그램을 구축(환경관리공단)하여 전국 지자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탄소포인트제 운영관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행정안전부와 협력하여 지자체 탄소성적표지 시스템 표준화를 꾸준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탄소포인트제에 참여를 원하는 지자체는 언제든지 환경부에 참여 신청할 수 있으며, 참여 지자체에 거주하는 주민은 누구든지 자율적으로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하여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동참할 수 있다.

※ 「탄소포인트제」홈페이지 및 운영프로그램 : <http://cpoint.or.kr>

총인, 선진국 수준으로 관리된다

4대강 살리기의 핵심과제인 “수질개선”의 관건이 되는 것으로 알려진 “총인”이 앞으로는 선진국 수준으로 관리된다. 환경부는 '12년까지 4대강 유역의 하·폐수 처리장에 화학적 처리시설을 추가하여 총인을 평균

94%까지 처리하는 등의 수질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인”은 조류 성장의 주요 원인물질로 작용하고 있는데 조류로 인한 유기물 수질오염은 전체 유기물 부하량의 25~3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환경부에서는 지난해 8월부터 금년 5월까지 팔당·대청호 상류 하수처리장 4개소를 대상으로 화학적 처리시설의 효율성 검증사업을 추진해온 결과 기존의 생물학적 처리와 더불어 화학적 처리를 추가적으로 실시한 경우 총인의 처리 효율을 높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4대강 수계 내에도 이번에 확정된 4대강 마스터플랜에 따라 5천억원을 투자하여 하·폐수처리를 위한 화학적 처리가 이루어지게 될 예정이다.

2단계 사업장별 화학물질 배출량 공개 실시

환경부는 작년 1단계 59개 사업장을 시작으로, 올해 2단계 32개사업장의 배출량을 공개하고, 2010년에는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대상사업장 전체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0년부터 시작된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는 그 동안 지역별·화학물질별·업종별로 종합적으로만 공개하여 왔으나, 작년부터 “화학물질 배출량 정보공개시스템(<http://tri.nier.go.kr/triopen>)”을 통해 사업장별로도 화학물질 배출량을 공개하고 있다.

383개 공개 사업장의 '07년도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결과 및 특성을 살펴보면, 화학물질 취급량은 9,856만 톤으로 전체 화학물질 배출량 보고대상 사업장(3,012개) 취급량의 77.1%, 배출량은 8,141톤으로 전체 배출량의 17.1%를 차지하였다.

공개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저감 성과를 살펴보면, 화학물질 취급량이 '01년 7,020만톤에서 '07년 9,856만톤으로 40%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출량은 '01년 13,304톤에서 '07년 8,141톤으로 39%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 사업장은 주로 시설개선, 공정관

리, 물질대체 등의 방법을 적용해 화학물질 배출량을 저감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화학물질 배출량이 사업장별로 공개됨에 따라 기업, 주민 등 이해관계자간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화학물질 정보를공유하는 선진국형 화학물질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기업의 화학물질 위해정보소통(Risk Communication)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환경청을 중심으로 대응체계를 구축중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향후 화학물질 RC를 통해 지역공동체와 기업간 상호 신뢰가 형성되면 함께 발전하는 지속가능한 사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생명이 깨어나는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정부는 지난 6월 8일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마스터플랜을 최종 확정했다.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은 지난 4월 27일 정부합동보고회에서 중간성과를 보고한 이후, 4대강 인근 12개 시·도를 대상으로 지역설명회, 전문가 그룹의 자문 및 관련학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확정하게 된 것이다. 확정된 마스터플랜의 주요내용을 보면, “기후변화 대비, 자연과 인간의 공생, 지역 균형발전과 녹색성장 기반 구축, 국토재창조”를 목표로 다음과 같은 5대 핵심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 ▶ 향후 물 부족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 가뭄에 대비해 보 설치, 중소규모의 댐 건설, 농업용 저수지 증고 등을 통해 충분한 수자원을 확보하고자 한다.
- ▶ 갈수록 빈발하는 대규모 홍수에 대응하기 위해 퇴적토 준설, 노후제방 보강, 댐 건설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
- ▶ 하수처리시설 확충과 녹조저감시설 설치 등으로 2012년까지 본류 수질을 평균 2급수 수준으로 개선하고, 생태하천 및 습지 조성, 농경지 정리 등을

통해 생태를 복원하고자 한다. 특히 수질오염이 심한 유역을 집중 개선하고, 본류 뿐 아니라 지류의 수질도 개선할 예정이며 4대강 추진본부에 수질환경 분야를 담당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예정이다.

▶ 하천을 생활·여가·관광·문화·녹색성장 등이 어우러지는 다기능 복합공간으로 개조하기 위하여 자전거길 조성, 체험관광 활성화, 산책로·체육시설 설치 등을 확대하고자 한다.

▶ 금수강촌 만들기, 문화가 흐르는 4대강 등 강 살리기로 확보되는 인프라와 수변경관을 활용한 다양한 연계사업 추진으로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4대강 살리기 본사업은 2011년까지 완료하고, 댐·농업용저수지와 직접연계사업은 2012년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를 통해 기존 “사후복구”에서 “사전예방” 위주의 투자로 전환함으로써 4대강 유역의 수해로 인한 연평균 피해액과 복구비를 상당부분 절감하고, 수질개선, 물 확보, 문화·관광 활성화 등의 간접 편익도 매우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심 속 질한 자연에서 치유하자

도심공해가 심해지고 각종 유해물질이 늘어갈 수록 아토피, 천식, 소아발달장애 등 환경성 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이와 가족들의 근심도 날로 커지고 있다. 이런 근심을 해소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해 환경부에서는 ‘자연 속에서 건강찾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2008년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과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자연환경이 우수한 국립공원 등에서 진행되는 바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주관하고 환경보건센터로 지정된 종합병원, 국·공립 대학병원 등이 함께 협력하여 운영된다.

올해는 지난 5월 23일 강화도에서 개최된 “놀며 배우는 알레르기 그리고 환경” 캠프를 시작으로 10월말까지 총 20회가 운영되며, 약 600여명이 참여할 수 있

환경 뉴스

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둘째·넷째 토요일 휴업일이 있는 주말에 주로 1박 2일로 운영되며, 2박 3일, 당일형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된다.

특히 참가 어린이들이 주변환경, 음식물, 생활습관 등에 각별한 주의를 요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문의, 간호사, 의과대학생 등 전문 코디네이터가 함께 참여·지원한다.

각 프로그램별 참가자는 환경성 질환 어린이를 우선하여 선착순으로 선정할 계획으로, 참가신청은 국립공원관리공단 및 환경보건센터에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온실가스 감축 문화 확산, 정부 공동협력사업으로 추진

환경부와 지식경제부는 지난 6월 26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각각 운영하고 있는 온실가스감축 자발적 프로그램인 환경부의 탄소포인트제, 그린마일리지와 지식경제부의 탄소캐쉬백의 적립 포인트 사용을 통합·운영키로 하였다.

3개 제도 포인트 통합운영을 위해 7월말까지 탄소캐쉬백은 제도간 전용선을 개설하고 탄소포인트는 기존 운영시스템에 통합 운영시스템 구축하고 참여를 원하는 지자체와 협의하여 8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그린마일리지는 탄소캐쉬백 운영시스템과 연계가능토록 구축된 유통사와 협의하여 우선 연계 추진하고 미 구축된 유통사와는 시스템 구축정도 및 운영상황을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참여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탄소포인트 : 가정·상업시설 등의 전기, 수도 등 에너지 절약량에 따라 포인트 제공
 - ▶그린마일리지 : 판촉용 포장재 생산 등에 소요된 준비비용의 절감분을 유통업체를 통해 마일리지 제공
 - ▶탄소캐쉬백 : 저탄소제품 구매시 또는 저탄소실천 매장 이용시 포인트 제공
- 이에 따라 자발적 실천 프로그램의 포인트 통합운영

신체제 구축으로 추진기반 공고화 및 대국민 참여 공감대 형성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기후변화에 대응한 에너지절약 및 저탄소제품 구매 촉진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자발적 실천 유도를 위해 각 부처에서 다양한 자발적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함으로써 인해 대국민 혼선 우려와 제도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환경부와 지식경제부는 긴밀한 협의를 통해 양 부처가 추진 중인 탄소포인트, 그린마일리지, 탄소캐쉬백 등 3개 제도의 고유특성을 살려 운영하되, 각각의 제도를 통해 적립된 포인트는 상호 호환적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앞으로 환경부와 지식경제부는 제도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조하여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며 향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각종 정책 및 현안사안에 대하여도 양 부처가 공조체제를 지속 유지하여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폐기를 태운 열, 에너지로 사용한다

환경부는 작년 한해 폐기물 소각시설 78개소의 여열 회수·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소각과정에서 발생된 총 여열 중 86.6%가 회수·이용된 것을 확인하였다.

회수·이용된 여열은 약 27만 세대가 사용하는 전기 또는 약 76만세대가 사용할 수 있는 열량에 해당되며, 또한 원유 901천kl를 사용해 생산하는 에너지와 맞먹기 때문에 화석연료 대체 효과가 크다. 이는 온실가스를 약 254만톤 정도를 감소하고 432억원 어치의 탄소배출권 만큼의 가치이다.

폐기물 소각시설은 단순히 쓰레기를 태우는 시설이 아닌 폐기물에서 에너지자원을 회수하는 시설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소각시설에서 회수·이용된 여열의 이용실태를 살펴보면 지역난방공사와 한전 등에 열을 공급해 816억원의 판매수익을 얻고 연간 총1,862억원 상당의 난방·전력비를 절감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환경부는 각 지자체 및 민간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여열의 회수·이용율을 높이기 위하여 소각여열 회수시설에 대한 국고지원, 여열 공급처 확대, 열병합발전시설 설치 등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민지원사업비 편리하게 사용하세요 한강유역환경청, '09. 7. 1부터 전용 카드제 실시

한강유역환경청(청장 : 한기선)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주민지원사업 증가구별로 지원되는 직접지원 사업비를 '09. 7. 1부터 전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직접 지원비는 대상자가 물품 등을 구입한 후 관리청에 영수증을 제출·심사하여 지급하는 사후정산 형태로 운영하여 왔었다.

주민지원사업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정부의 수질 개선정책에 동참을 유도하도록 지원하고 있는 제도로서 매년 700억원 이상씩 지원하고 있으며, 이중 가구별로 지원되는 직접지원사업은 90억원 가량 규모이다. 이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주민 불편 해소 및 관리청 행정력 낭비 방지 등을 위하여 농협중앙회 및 BC카드사와 제휴계약을 체결('09. 6. 19)하고, 4대강 수계 중 최초로 주민지원사업 전용카드를 발급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번에 도입되는 주민지원사업 전용카드는 농협중앙회에서 발급하는체크카드로서 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직접지원비를 이체하여 대상자들이 잔액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물품 등을 구입할 수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본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경우그간 직접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및 집행 효율성 제고로 정부의 수질개선정책에 대한 대국민 만족도 제고에 상당부분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 소식

주한 중국대사 초청 간담회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지난 6월 10일 상의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청용화 주한 중국대사를 초청하여 '중국경제 향방과 한중 경제협력 과제'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청용화 주한 중국대사는 중국이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고 안정적이고 빠른 경제성장을 위해 총 4조 위안 규모로 2년에 거친 투자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중국의 올해 1/4분기 주요 경제지표들이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대사는 "앞으로 어느 시기가 되면 중국정부는 또 일련의 경제진흥 조치를 발표할 계획이며 우리는 올해 8% 경제성장률을 실현할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 한중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양국무역의 균형적인 성장유지와 무역마찰 예방 및 처리 ▲금융협력 강화와 외환보유액 확대 ▲금융, 통신, 에너지 및 환경보호와 제3국 투자 및 중점분야에서 협력 강화 ▲공동연구의 성과를 토대로 적극적이고 타당한 방법으로 한중 FTA 추진 ▲전자정보통신기술과 에너지 분야에서 첨단 신기술분야의 협력 강화 ▲국제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상호협력을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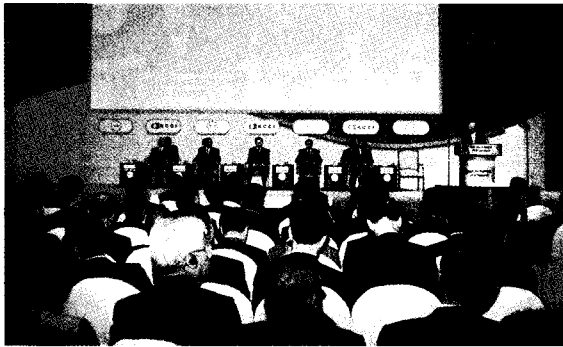
청용화 대사는 전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최근 30년 동안 중국경제는 가장 빠른 속도로 발전해 왔지만 자원과 환경에 엄청난 부담을 안겨주었다”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비교적 빠른 경제성장을 유지하면서 환경과 자원을 복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중국이 앞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데 있어 중대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중국 정부는 특히 녹색경제 발전을 위해 이웃나라인 한국과 기술, 인력, 자본 등의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원하고 있으며, 특히 태양에너지, 풍력발전, 조력 등의 분야에서 앞서 있는 한국과 협력과 함께 제3국 시장 동반진출도 고려할만 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는 회원업체 대표 및 임원 230여명이 참석하여 우리의 최대 교역상대국인 중국경제의 향방을 가늠해보고 향후 상호 경제발전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한-아세안 CEO 서밋



한-아세안 CEO 700여명의 사상 첫 만남이 이루어졌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주최한 ‘한-아세안 CEO 서밋’에는 이명박 대통령, 아피시트 웨차치와 태국총리, 응웬 쯤 중 베트남 총리, 훈센 캄보디아 총리 등 한-아세안 정상들과 역대 기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경제계를 대표해 참석한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전례 없는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환경에서는 선진국보다 신흥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특히, 크고 작은 위기를 넘어서신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에게 패러다임 변화는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 서비스협정 등은 향후 두 지역간 번영의 청사진을 그려 나가는데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화, 도전, 그리고 아시아의 번영을 위한 협력’을 주제로 열린 행사에는 손 회장을 비롯해 국내 경제인 400여명이 참석했다.

아세안 정상과 국내 기업인들의 ‘맞춤형 간담회’도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 상의측은 “아세안 정상이 바쁜 공식일정에도 불구하고 1시간 가량을 할애해 우리 기업인 10여명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함으로써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들간의 투자, 교역, 기술협력, 자원 및 에너지 협력 등 다양한 부문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기반마련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고 밝혔다.

이번 한-아세안 FTA 투자협정 체결을 계기로 아세안 기업들의 대한국투자 분위기를 살려나갈 것으로 보인다. 또 필리핀 재생에너지 발전 프로젝트, 베트남 항만개발 프로젝트, 인도네시아 페리보트 프로젝트 등 수년 내에 사업이 추진되는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회를 가짐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해외수주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김상열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이번 한-아세안 CEO 서밋은 글로벌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이 지역의 기업인 700여명이 자발적으로 모이게 돼 경제협력 관계 증진을 위한 구체적 논의의 장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아울러 우리 정부의 ‘신아시아 구상’을 실현하는데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